

전통시장 조례 개정 갈등으로 갈라진 남구 민심

광주 남구 시장 상인들 대거 불참

‘반대 의견 없는’ 주민공청회 파행

광주시 남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개정에 반대하는 시장 상인들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다.

남구는 공청회 자리를 빌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받아내는데 성

공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면서 갈라져 있는 민심을 봉합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광주시 남구는 5일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관에서 신청사 내 대규모 의류매장·가구 백화점 등의 입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 여부를 묻는 주

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청사와 인접한 무등·봉선시장 상인 등이 ‘형식적인’ 공청회임을 들어 불참하는 바람에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신, 이들 상인들은 주민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청사 내 대규모점포 유치

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조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예초 공청회는 찬·반 측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상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반대 측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남구가 조례 개정 추진 배경 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 머물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찬·반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한 게 전부였다.

이모(여·50·남구 월산동)씨는 “대형 의류 매장 등 남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설 입점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냈고 양모(28·남구 주월동)씨는 “교통편이 좋아 다른 지역 쇼핑

을 이용하기 수월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대형점포를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했다.

주민공청회 뒤 이뤄진 주민 436명(실 투표자 338명)을 대상으로 한 조례 개정 찬·반 설문투표 결과, 338명 중 306명(90.5%)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는 22명(6.5%)에 불과했다.

남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남구 주민 1000명(19세 이상 성인 남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에서도 평균 663명(66.3%)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37명(33.7%)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성 2명 중 1명 “납편의 휴대전화 같이 볼 수 있어야”

여자 2명 중 1명은 납편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은 최근 미혼남녀 951명(남 470·여 481)을 대상으로 ‘결혼 후 공유해야 하는 생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휴대전화(54.0%)를 1위로 꼽았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시간(19.7%), 각종 사이트 비밀번호(17.8%), 모든 것(8.5%)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이성과의 약속(39.4%), 휴대전화(30.5%), 모든 것(19.4%), 개인 시간(10.7%)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업무 세분 전문검사 뜬다

형사·강력·특수·공안·기획 등 전통적 검찰업무를 173개로 세분화해 전문분야를 부여하는 검사 전문화 방안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유경필(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검사 등 모두 21명을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임관 3년차 이상 검사 1563명의 신청을 받아 각자 3개 이내로 전문분야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특정 분야 전문검사에게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기는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용품 교환·대여해줍니다” 아동용품을 교환해주거나 대여해주는 ‘빛고을 키즈 공유센터’가 5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문을 열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던 유모차, 장난감, 아동서적, 카시트, 보행기 등 각종 아동용품을 이 곳으로 가져가면 다른 아동용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동용품을 대여해주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 고교 수업료·입학금 동결

시·도 교육청 6년 연속 제자리...공립유치원 수업료 면제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6년 연속 동결됐다.

5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은 2009년 이후 6년 연속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되게 됐다.

내년도 광주지역 고등학교 연간 수

업료는 일반고(비특성화고)가 134만 8800원, 특성화고 130만9200원으로, 타 광역시 고등학교 수업료 평균액 136만4910원보다 낮다.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연간 25만9200원이지만 올해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일반고의 경우 지역에

따라 수업료는 연간 63만6000원~115만20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5900원이다. 특성화고는 지역에 따라 수업료는 43만4400원~62만 76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 4800원으로 올해와 같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물가 인상·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부터 6년 연속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고 밝

■ 광주·전남 고교 수업료·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구분	급지별	수업료 (연액)	입학금		
광주	일반고	1,348,800	17,200		
	특성화고	1,309,200			
전남	일반고	1급지 가(평준화)	1,152,000	15,900	
		1급지 나(비평준화)	933,600	14,800	
		2급지 가(읍지역)	877,200	12,900	
		2급지 나(시지역)	794,400	12,700	
		3급지 도(서·벽지)	636,000	11,800	
	특성화고	1급지	627,600	14,800	
		2급지	가	578,400	12,900
			나	542,400	12,700
		3급지	434,400	11,800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7분
해질녘 17시 20분

달돋이 10시 09분
달질 21시 05분

낮에는 포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 때 구름 많겠다.

광주	맑음	0/10℃
목포	맑음	2/10℃
여수	맑음	5/11℃
나주	맑음	-2/10℃
완도	맑음	4/11℃
구례	맑음	-1/11℃
강진	맑음	1/11℃
해남	맑음	1/11℃
장흥	맑음	1/11℃
순천	맑음	-1/11℃
영광	맑음	0/9℃
진도	맑음	2/10℃
전주	맑음	-1/9℃
군산	맑음	-2/9℃
남원	맑음	-2/9℃
흑산도	맑음	7/10℃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최저/최고	-2/11	0/11	3/7	0/6	-1/5	-2/4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직영 검토

광주시, 위탁 응모업체 모두 부적격 판정 재공모시 지원금 지원 방안 등 다각 논의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법인·단체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광주시는 5·18 교육관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재심의를 열고 (사)5·18 구속부상자회를 주관 기관으로 광주 FC 사커클럽, 서구 시니어클럽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광주시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참여 신청 기관이 5·18 교육관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게 심의위원회 판단이다. <광주일보 11월 29일자 7면> 교육관이 5·18 역사와

꼭 밋 뽀빠를 막고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 운영 방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재공모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모집 공고에 ‘교육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직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직영체제로 갈지, 재공모를 할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마무리 될진 모르겠지만 조만간 향후 일정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한 조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무상보육의 근간을 만들어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국비부담율 50%(서울20%)는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
모두의 상생을 위한 국비부담율 70%(서울40%)의
합리적 변화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이상실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대한민국 무상보육의 근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